

반도체 멈추면 최대 100조 손실... 中 경쟁사 반사이익 우려

생산 차질에 성장률 0.5%p 하락 우려
엔비디아·AMD 고객 이탈 가능성
中 반도체 업체 점유율 확대 우려
업계 "고객 신뢰 훼손이 더 치명적"
파업 장기화 땀 경제 부담 불가피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둔 20일 오후 3시경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 붙어있는 사측 규탄 플래카드.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우리 한 몸, 한 가족"이라는 호소와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에도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이 끝내 결렬되면서 총파업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파업이 가져올 국가 경제 부담은 물론 글로벌 경제 여파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 파업이 단순한 회사의 손실을 넘어 한국 경제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공급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조가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경우 직간접 손실이 총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한다. 반도체 생산라인이 24시간 내내 수백 개의 초정밀 공정으로 이어지는 장치 산업인 만큼 단기간 멈춰도 피해는 견줄 수 없이 커진다. 특히 파업 이전 생산 축소 작업과 파업 종료 이후 자동화 라인 재가동·품질 안정화 과정까지 진행하면 실제 정상화까지 한 달 이상 소요

될 수 있다. 이번에 나온 피해 규모는 지난 2018년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정전 사태를 비교한 수치다. 당시 28분간 라인 가동이 중단됐지만 약 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환산하면 시간당 약 1000억원, 24시간 기준 2조 6000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한다. 제조공정이 전면 중단될 경우 최대 100조원 규

모의 직·간접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총파업을 주요 거시경제 리스크로 보고 영향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은 18일간 총파업으로 메모리 반도체 생산라인이 전면 중단되고 정상화까지 약 3주가 걸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가 약 30조원에 이르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대 0.5%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18일간 파업이 이어질 경우 DS부문 매출이 최대 5억9000만달러, 약 8조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가장 큰 문제는 총파업에 따른 영향이 회사 내부에 그치지 않고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국내 수출은 물론 글로벌 IT 공급망 등 첨단 제조업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메모리 공급 차질이 현실화 되면 협력사와 고객사 등의 부담이 확대된다. 이

에 따라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여전히 강한 엔비디아·AMD 등 글로벌 고객사들이 대체 공급망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삼성전자의 위기 상황을 이용해 경쟁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국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이 점유율 확대와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사실 피해 규모는 예측하기 힘들다"면서 "반도체 제품 생산 차질보다 고객 신뢰 등 복합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반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 기업의 문제로 정리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노사협상 결렬 소식에 靑도 재계도 우려

영업의 배분 방식 놓고 이견 내부 불만·시민 반응 엇갈려
생산차질·고객신뢰 하락 우려
삼성전자 노사 합의가 지연되며 총파업 우려가 커지자 청와대와 재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열린 국무회의 석상에서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두고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청와대는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성과급 배분 방식을 꼽았다. 특히 후

자 사업부와 적자 사업부 간 성과급 격차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 노사 간 입장 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적자 부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막힌 것 같다"며 "성과를 낸 부서가 일정 부분 부담을 나누는 방식 등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사측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삼성전자 DS사업부 직원 정모씨는 "신뢰관계 붕괴와 파업에 대한 결과 등이 모든 사태는 결국 경영진 책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권모씨는 "성과급 제도화를 투명하게 하는

계 핵심인데 외부에서는 단순히 돈 더달라는 식으로만 보이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전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직장인 권모씨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경쟁사와의 보상 격차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반면, 삼성전자 주주 박모씨는 "주주 입장에서는 파업 장기화로 주가가 흔들릴까 가장 걱정된다"며 "성과급 문제로 총파업까지 가는 것은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는 다소 부담스럽게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총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글로벌 고객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현정 기자 hyeon@



주주단체 "주총 없는 영업의 성과급은 무효"

영업의 연동 성과급 논란 가처분·무효 소송 예고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협상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주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명문화하면 법률상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번 주주단체의 법적 대응 예고는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이 노사 간 문제를 넘어 주주 권리 침해 문제로까지 번졌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20일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노사 최종 합의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내용으로 할 경우 이는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라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주총 결의를 거치지 않고 노사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합

의하면 상법 및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최종적인 노사 합의로 성립할 수 없어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총 결의 절차를 생략한 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강제하는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될 경우 효력 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을 즉시 제기하고 상법에 따른 이사의 위법행위 유 지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주단체는 노조를 향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위법한 파업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기업 가치 훼손은 주주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 행위라며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 및 기담한 개별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추가 하락 및 배당 지연 감소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구병기 기자 koosija_tea@

